

ISSUE PAPER

혁신적 포용정부를 선도하는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연구원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과 설계

이환성 연구위원(국정평가연구실)
황혜신 선임연구위원(국정평가연구실)
임다희 초청연구위원(국정평가연구실)
오화선 연구원(국정평가연구실)
이정혁 연구보조원(국정평가연구실)

1. 서론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정부지원 필요성
3. 국내외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4.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및 쟁점
5. 긴급재난지원금 설계방향



요약

코로나19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거대한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모든 국가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감소를 막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CARES Act'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고, 독일은 '즉시지원(Soforthilfe)'을 통해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다른 국가 또한 빠른 속도로 재정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앞서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나 코로나19와 인류가 오래 공존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한 재정지출 설계방향과 지급에 관한 여러 기준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향후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하나의 정책적 기준으로 잠재성장을 대비 경제성장을 예상치를 연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나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지급대상 선정과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01

서론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및 필요성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배경

- 코로나19의 출현과 확산은 전 세계에 전대미문의 거대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음
 -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로 인한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
 -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¹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탈세계화로 인한 기업의 생산 활동 축소²
 - 기업의 생산 활동 축소로 인한 고용시장 정체³와 수출 감소 등⁴
- 코로나 쇼크(Corona Shock)로 인한 정부의 역할 증대
 - － 코로나 쇼크(Corona Shock)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짐
 - 전대미문의 감염병 재난 상황 속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음
 - 사면초가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신속한 수립과 시행이 요구됨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행
 - －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킴⁵

1 뉴스1(2020.02.11.). “신종 코로나에 소상공인 97% 매출·방문객 감소, 금융 지원 필요”

2 뉴스핌(2020.06.22.). “팬데믹에 탈세계화 ‘속도’ 곳곳에 무역 장벽”

3 헤럴드경제(2020.06.22.). “청년층 ‘코로나19’ 최대 충격, 환란보다 더 큰 고통…피해 장기화 우려”

4 세계일보(2020.06.22.). “코로나 쇼크에 6월 중순까지 수출 -7.5%… 4개월 연속 감소 전망”

■ 제 n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

- 감염병 재난 상황의 장기화
 -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음⁶
 - －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 현상과 집단감염을 통한 2차 대유행을 동시에 대비하고 있음⁷
 - － 코로나 쇼크(Corona Shock)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제 n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
 - － 경기침체의 장기화 예측으로 인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⁸
 - － 정부는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 － 추가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지급 주체, 규모, 대상, 방식 등 설계에 대한 사전논의가 필요함

2. 논의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시사점과 지원방향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재난 극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
-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의 존속 필요성과 지원방향을 검토하고 효과 극대화 등을 고려한 타당한 지원방향을 사전에 논의
- 국내·외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설계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쟁점들을 파악하여 제1차 지급 시에 나타난 논란이나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
-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설계방향을 사전에 제시하여 도입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기여. 아울러 코로나19와 유사한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설계 방향 제시

5 아시아경제(2020.06.24.).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 심리 회복세 어디서 어떻게 쓸까?”

6 IT조선(2020.06.23.).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에 백신 개발 장기화 전망”

7 연합뉴스(2020.06.18.). “당국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모두 대비...폭발적 확산 가능성도”

8 인사이드(2020.06.02.). “국민의 74%가 문 대통령에게 ‘2차 지원금’ 달라고 요구했다”

0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정부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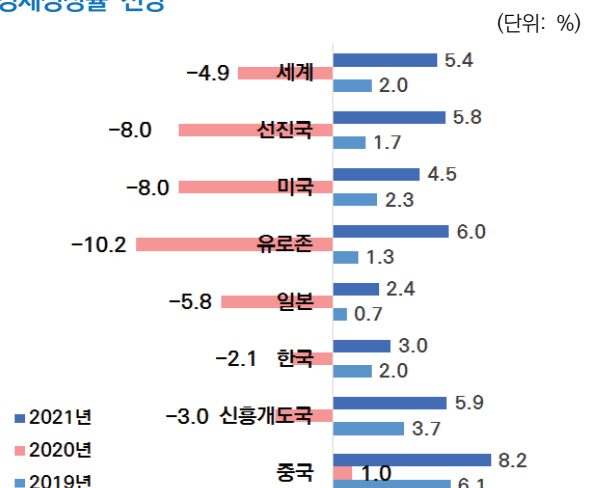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 대봉쇄(Great Lockdown): 전례 없는 세계경제 위기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공황에 버금가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 (IMF) 코로나19 사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대침체(Great Recession)와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넘어서는 경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유례없는 세계경제 위기를 전망⁹
 - －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최대 -8%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가파른 경기침체를 예상¹⁰

[그림 1]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019년	2020년		2021년	
		4월	6월	4월	6월
세계	2.0	-3.0	-4.9	5.8	5.4
선진국	1.7	-6.1	-8.0	4.5	5.8
미국	2.3	-5.9	-8.0	4.7	4.5
유로존	1.3	-7.5	-10.2	4.7	6.0
일본	0.7	-5.2	-5.8	3.0	2.4
한국	2.0	-1.2	-2.1	3.4	3.0
신흥개도국	3.7	-1.0	-3.0	6.6	5.9
중국	6.1	1.2	1.0	9.2	8.2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IMF)의 내용 일부를 저자가 발췌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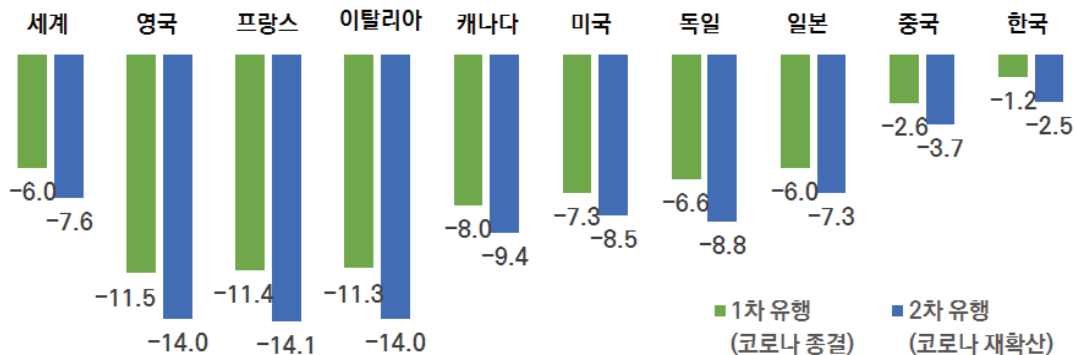
⁹ 한국은행(2020). IMF Chief Economist Gopinath 모두 발언, 대봉쇄 :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¹⁰ 파이낸셜뉴스(2020.06.24.). “세계경제 회복은 2022년에나 가능”

-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은 더욱 확대되고 2021년 회복세는 약화할 것으로 예상
 - (IMF) 6월 발표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하며, 지난 4월(-3.0%) 전망치보다 1.9% 하향 조정하고 세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¹¹
 - 예상보다 심각한 1분기의 경기침체,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일자리 감소 등을 주요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으며 2021년 성장률은 4월(5.8%) 전망치보다 0.4%낮은 5.4%를 예측
 -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가능성, 추가 지원정책으로 인한 상방 리스크와 코로나19의 재유행 및 금융여건 긴축전환 등의 하방 리스크가 모두 높아 불확실성이 상존
 - (OECD) 전 세계의 경제타격을 예상하며, 1차 유행에서 종결(-6.0%)되는 상황과 2차 유행 상황(-7.6%)을 가정한 2가지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을 발표¹²

[그림 2] OECD 주요국 2020년 전년 대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OECD)의 내용 일부를 저자가 발췌하여 작성

- (세계은행) 6월 발표에서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지난 1월(2.5%)보다 7.7%나 하향 조정했으며, 하방 리스크가 큰 2차 유행 시나리오에서는 -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세계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경제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성장률을 전망
 - (OECD) 6월 발표에서 한국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고,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¹³

¹¹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0.06.24.).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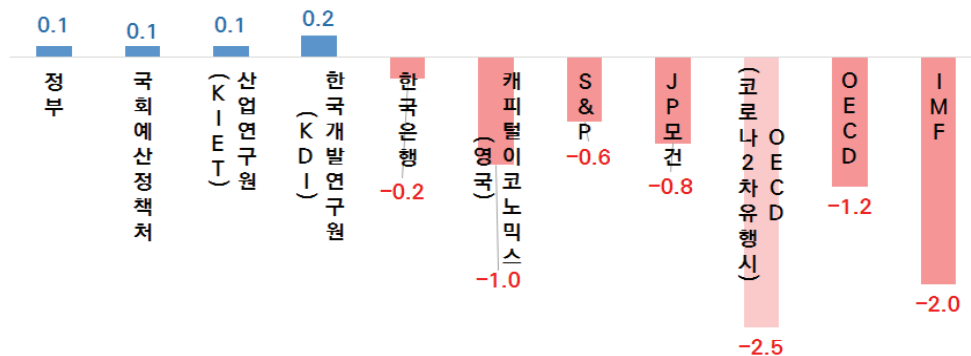
¹² 뉴스워커(2020.06.22.).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국민 긴장감 고조...피해 최소화 위한 방법은?’”

¹³ 매일경제(2020.06.10.). “IMF 이어 OECD도...”한국, 최악의 경우 -2.5% 성장

- (IMF) 6월 한국 GDP성장률을 4월(-1.2%) 전망치보다 0.9% 하향 조정된 -2.1%로 전망했으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3%로 4월 전망치(3.4%)에서 0.4% 하향 조정¹⁴
 -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로 한국의 올해 GDP성장률을 0.8%로 하향 조정했으며, S&P는 -0.6%,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1.0%로 역성장을 전망¹⁵
- 국내 기관들은 대부분 $\pm 0\%$ 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며 국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냈으며, 그 중 KDI의 전망치가 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은행은 상반기 -0.5%와 하반기 0.1%로 연간 -0.2% 성장을 전망했으며, KDI는 올해 상반기 -0.2%, 하반기 0.5%로 연간 0.2% 성장을 전망
 - 산업연구원과 정부,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¹⁶

[그림 3] 2020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출처: 각 기관의 2020년 3월 이후 발표 전망수치를 저자가 발췌하여 작성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비교적 낮은 폭의 하락이 전망되고 있으나,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체감 경기침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성장률 하락, 비우호적인 대외 수출여건 등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2020~2024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3%로 이전 5년(2015~2019년)보다 0.5% 하락할 것으로 분석¹⁷
 -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는 산업과 노동구조 변화, 글로벌 교역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잠재성장률 역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¹⁸

14 조선비즈(2020.06.24.). "IMF 올해 韓 성장률 전망치 -1.2% → -2.1%로 하향...상당한 하방위험"

15 뉴스터치(2020.03.23.). "S&P '코로나19확산 한국 경제성장 마이너스 성장' 전망"

16 서울신문(2020.06.22.). "산업연구원 비대면 제외한 전산업 수요부진...과감한 투자유인책 필요"

17 머니투데이(2020.06.28.). "예정처 "향후 5년간 한국 잠재성장률 2.3%에 그칠 듯"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연중 지속될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규모가 최대 54조 4,000억 원에 이를 수 있어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¹⁹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 정부 재정지원의 경제회복 효과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긴급조치성 정부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경제회복을 지원
 - 신용보증, 유동성 지원, 실업 보험 및 수당 확대, 조세 감면 등 대규모의 적시 맞춤형 재정·통화·금융정책 등을 실시하여 투자 감소 및 실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 전례 없던 감염병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이루어졌으나, 체계적인 설계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시행되어 실질적인 경제회복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 존재

■ 효율적·효과적인 정부지원의 필요성 확대

-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일괄적 긴급지원이 아닌 국가별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중요성 증가
 - 올해 경제 위기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전 세계 국가 모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 추구 필요
 - 코로나19의 지속에도 한국 정부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한 상황 이라고 OECD는 분석했으나, 추가 소득지원은 분배 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KDI는 한국의 1차·2차 추가경정예산의 GDP 증가 효과가 5%안팎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규모 11조 7,000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 12조 2,000억 원 가량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므로 실질적인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²⁰

¹⁸ 아시아경제(2020.06.29.). “韓銀 “코로나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¹⁹ 조선비즈(2020.06.24.). “코로나 충격 연말까지 가면 기업 유동성 54조 원 부족”

²⁰ 한국경제(2020.06.07.).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 미미”

03

국내외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1. 해외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 코로나19 이후 해외의 재난지원금의 도입

-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인도,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및 도입 추진
-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싱가포르와 홍콩은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을 선택
 - 미국과 호주는 당초 보편적 지원을 추진하다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
 - 일본은 당초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다 보편적 지원으로 변경
 - 독일은 이미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구비하고 있어 선별적 지원 추진

■ 미국의 ‘Economic Impact Payment’

- 코로나19 관련 1차와 2차 법안의 내용²¹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 2020년 3월 6일 의회 통과, 83억 달러 규모,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보건부로 자금 조달
 -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 2020년 3월 18일 의회 통과, 1,100억 달러 규모
 - 유급 병가, 실업보험, 비 보험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무료 검사 지원

²¹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5.07.). “美 정부 코로나19 지원책 ‘CARES Act’”

- 3차 법안으로 2020년 3월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 3단계 법안)를 최종 승인
 - CARES Act는 2조 2,000억 달러(대략 2,700조 원) 규모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 규모이며, 이 예산 중 2,930억 달러가 긴급재난지원금에 할당됨
 - 긴급재난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의 선별적 지원 대상
 - 1인 가구 세금보고: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금액인 1,200달러를 지급. 최대 금액 기준 1,200달러 초과 100달러 당 5달러씩 차감
 - 부부 세금보고: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금액인 2,400달러(1,200달러+1,200달러) 지급. 초과 100달러 당 5달러씩 차감
 - 17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엔 500달러를 추가

〈표 1〉 미국의 재난지원금

구분	미국
지급주체	연방정부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발행을 통한 민간차입 - 2020년 1분기 4,770억 달러, 2분기에 2조 9,990억 달러, 3분기에 6,770억 달러, 4분기에는 4,77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민간 자본을 차입 추진²²
지급 총 규모	2,930억 달러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득 7.5만(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 지급 - 소득기준 초과 시 초과소득 100달러 당 지급액 5달러씩 차감 → 연소득 9.9만 달러(부부합산 19.8만달러) 이상부터 지급 대상 제외 - 만17세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 추가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방법 및 기간 - 은행계좌 직접 송금 : 국세청에 은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의 경우 4월 9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직접 송금 - 개인용 수표 우편 발송 : 4월 24일부터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 - 세금보고를 못한 경우로 사회보장번호 보유 시: 연 소득 1만 2,200달러 미만인 경우 온라인을 통해 현금 지원 신청 가능 (온라인 링크: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
지급형태	현금 또는 수표, prepaid debit card(EIP card)

출처: Cares Act, 미국 신청 사이트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검색일: 2020.06.17.). 육도삼략 365(2020.05.06.)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²² 육도삼략365(2020.05.06.). “미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돈 퍼붓기...2분기 3조 달러 국채 발행”

■ 독일의 ‘즉시지원(Soforthilfe)’

○ 법률과 지원의 신속성

- 연방정부 법안
 - ‘사회보장패키지(Sozialschutz-Paket)’로 불리는 법안(Gesetz für den erleichterten Zugang zu sozialer Sicherung und zum Einsatz und zur Absicherung sozialer Dienstleister aufgrund des Coronavirus SARS-CoV-2) 2020년 3월 24일 의회 제출, 3월 28일 시행
- 베를린시의 지원
 - 2020년 3월 19일 베를린시는 코로나19 즉시지원금 정책을 발표
 - 베를린시는 3월 27일 금요일 12시부터 베를린투자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음
 - 독일 베를린에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3일 만에 바로 지급
 - 베를린은 다른 도시보다 문화예술 분야 산업이 크고,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많음: 베를린시에서는 현재 약 20만 명이 프리랜서 및 1인 자영업자로 등록

○ 선별적 지원 및 증명이 안 될 경우 반납

- 독일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음: 독일의 많은 저소득 가정, 구직자, 실업자, 학생, 노인, 연금생활자 등은 이미 국가의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베를린에서 세금 번호를 받고 수익활동을 하는 직원이 최대 10명까지인 사업자들로 한정.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경제 활동을 중단시켜 이를 보상하는 측면이 있음
- 증명 및 반납: 선 지급 후 현금 흐름이 어려웠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불필요했던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납할 것을 명시

〈표 2〉 독일 베를린시의 재난지원금

구분	독일 베를린시
지급주체	베를린시
재원	베를린시의 예산 활용, 2020년 4월 6일부터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
지급 총 규모	베를린시: 4월 1일 기준 신청자 10만 명에게 총 9억 유로(한화 약 1조 2,123억 원)를 지급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사업자는 9,000유로, 6~10인 사업자는 15,000유로(약 1,993만 원) 상한 - 신청에 따라 선 지급하되, 추후 현금 흐름 어려움이 있었음을 입증 필요 - 불필요했던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납(선지급 후확인) ○ 국적 불문, 외국인 포함
지급방식	투자은행(Investitions Bank Berlin, IBB)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즉시지원금을 신청 받음 (https://www.ibb.de/de/wirtschaftsfoerderung/themen/coronahilfen/coronahilfen.html)
지급형태	현금

출처: 오마이뉴스(2020.04.02.)를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 일본의 ‘特別定額給付金(특별정액급부금)’

○ 과거 일본의 유사 지급 사례

- 지역진흥권: 1999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쿠폰 지급
- 정액급부금: 금융위기로 2009년 전 국민(17~64세)에게 1인당 1만 2천 엔(약 14만 원), 16세 이하와 65세 이상에게는 2만 엔씩 지급

○ 2020년 4월 7일 ‘긴급 경제대책’ 발표²³

- 감염확대 방지, 고용유지 및 사업 지속 지원, 경제활동 회복, 경제구조 구축의 네 부문으로 구성된 59조 5,000억 엔 규모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 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22조 엔을 할당

○ 보편적 지원

- 전 국민 대상: 2020년 4월 27일 기준 주민기본대장 등재자
- 외국인 대상: 3개월 이상 일본 체류 자격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표 3〉 일본의 재난지원금

구분	일본
지급주체	○ 소관부서: 총무성 특별정액급부금 실시본부 (콜센터 03-5638-5855 / 09:00~18:30 토·일·휴일 제외) ○ 실시주체: 기초지자체(市區町村)
재원	예산, 국채 발행 * 소요 경비(지원금 및 사업비) 전액 일본정부 부담
지급 총 규모	12조 7,344억 엔 (운영비 제외)
지급대상	○ 전 국민 (2020년 4월 27일 기준 주민기본대장 등재자) 국민 1인당 10만 엔 지급 ○ 3개월 이상 일본 체류 자격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도 1인당 현금 10만 엔(약 113만 원) 지급
지급방식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 (https://myrna.go.jp/SCK0101_01_001/SCK0101_01_001_InitDiscsys.form) - 신청 후 지급대상자 계좌에 현금 송금
지급형태	현금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44), 한겨레(2020.04.21.), <https://myrna.go.jp>(검색일: 2020.06.24.)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²³ 한국무역신문(2020.04.23.). “코로나19에 각국 재정지출 급증… 생계·고용 지원 나서”

○ 중복지급과 지급의 지연

- 약 2,000명 이상에게 중복으로 지급
- 우편 신청으로 주로 진행되는 일본의 재난지원금 지급률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됨²⁴
 - 2016년 1월부터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넘버 제도를 도입했으나, 2020년 5월 그 보급률은 16.2% 수준으로 저조하며, 마이넘버로 신청하더라도 시스템 과부하와 제한적 정보 제공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²⁵

■ 싱가포르의 'Care and Support Package'

-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예산을 발표하여 총 599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 예산을 편성(GDP의 12%로 역대 싱가포르 예산 중 최대 규모)
 - 2020년 2월 18일 국회에 2020년도 본예산(Unity Budget) 제출 시 총 64억 싱가포르 달러를 편성하였으며, 이 중 가계 지원을 위한 총 16억 싱가포르 달러(약 1.4조 원)의 현금 지급 계획(Care and Support Package)이 포함됨
 - 2020년 3월 26일 가계 지원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84억 싱가포르 달러의 1차 추경 예산(Resilience Budget) 발표
 - 2020년 4월 5일 가계 지원 확대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51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Solidarity Budget)을 발표

〈표 4〉 싱가포르의 재난지원금

구분	싱가포르
지급주체	정부
재원	○ 본예산과 추경 예산, 유보금(current reserve, past reserve) - 1차 및 2차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적립해 둔 적립금(Past Reserve)중 210억 싱가포르 달러(1차 추경안 170억 싱가포르 달러, 2차 추경안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인출·활용할 계획
지급 총 규모	57억 싱가포르 달러(약 4조 8,900억 원)
지급대상	○ 만 21세 이상 국민에게 소득별로 600~1,200 싱가포르 달러 (약 52~104만 원) -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300 싱가포르 달러 추가 - 만 50세 이상 100 싱가포르 달러 추가(바우처 형태)
지급방식	○ 개인 은행어플, 온라인 बैंकिंग 신청 ○ 현금 계좌송금 또는 수표 우편발송 - 전 국민 대상 600 SGD는 4월 중 지급, 소득·연령·자녀 기준에 따른 현금 지원은 6월 중 지급 예정
지급형태	현금 또는 수표, 기존 복지카드에 추가

출처: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2020.04.13.)과 싱가포르 Care and Support - Cash 공식사이트(검색일: 2020.06.17.)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²⁴ Sam Kim & Yoshiaki Nohara. (2020.05.21.). "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 *Bloomberg economics*

²⁵ 머니투데이(2020.05.12.). "일본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인데 관공서 마비된 사연"

○ 보편적 지원이되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이나 소득과 부동산 소유,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됨
 - 21세 이상 싱가포르 성인의 경우 모두 지급 대상이나, 소득과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적용
 -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300싱가포르 달러(약 26만 원)를 추가 지급함
 - 50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에게는 기존에 발급되었던 복지카드(PAssion Card)에 100싱가포르 달러(약 8만 6천 원)를 추가로 충전

〈표 5〉 Care and Support

2019년도 과세소득 (싱가포르 달러)		\$0-\$28,000	\$28,001-\$100,000	\$100,000 이상 또는 하나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2020년도 21세 이상 모든 싱가포르 성인	Care and Support - Cash	\$900	\$600	\$300
	Solidarity Payment(연대 지불금) [4월 지급]	\$600 (첫번째 Care and Support - Cash 사업의 \$300은 4월에 지급)		
	나머지 Care and Support - Cash [6월 18일 이후 지급]	\$600	\$300	\$0
20세 이하 자녀를 둔 성인 부모	부모 대상 Care and Support - Cash [6월 18일 이후 지급]	\$300		
2020년도 50세 이상 싱가포르인	PAssion Card Top-up (현금 충전식 복지카드) [6월 18일 이후 지급]	\$100		

출처: 싱가포르 Care and Support - Cash 공식사이트 https://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20/budget-measures/care-and-support-package(검색일: 2020.06.17.)

■ 해외 사례 종합

○ 해외 국가들의 재난지원금 제도의 차이

- (지급대상) 일본과 싱가포르는 보편적 지원, 미국과 독일 베를린시는 선별적 지원
- (지급수준) 일본은 지급액이 국민 1인당 10만 엔으로 동일, 미국과 싱가포르는 소득이나 자녀 등에 따른 차등 지급, 독일 베를린시는 업체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
- (지급형태) 독일 베를린시와 일본은 현금 위주, 미국과 싱가포르는 현금 외에 수표와 복지카드 등

2.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요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²⁶
 - (지급주체) 서울특별시
 - (재원) 재난관리기금, 예비비²⁷
 - (지급규모) 5,600억 원
 - (지급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²⁸
 - 지급범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117만 7,000가구²⁹
 - (지급수준)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30만 원~50만 원)³⁰
 - 1인~2인 가구 30만 원, 3인~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형태 및 지급방식³¹
 - (지급형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 서울사랑상품권은 관할 자치구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 지원금액의 10% 추가 지급(예: 30만 원→33만 원)³²
 - (지급방식) 모바일 및 현장지급³³
 -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문자전송.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지급

■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³⁴
 - (지급주체) 경기도
 - (재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³⁵

²⁶ 매일경제(2020.05.2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마감...164만 가구 지원 예상”

²⁷ 연합뉴스(2020.05.26.).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동나...2천 328억 원 추가 수혈”

²⁸ 국민일보(2020.03.30.). “서울시민, 30일 접수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²⁹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 일자리사업 사회공헌 일자리 등 기존 정부지원 혜택가구 지급 대상에서 제외

³⁰ 경향신문(2020.03.26.).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

³¹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주요Q&A. <https://wis.seoul.go.kr/faq-pop.htm#line2>

³² 경향신문(2020.04.0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이틀 만에 첫 지급...9만명 몰려”

³³ 이데일리(2020.03.28.). “[서울러안내서]신청부터 수령까지, 재난긴급생활비 ‘꿀팁’”

³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gg.go.kr>

³⁵ 뉴스1(2020.03.24.). “[Q&A]이재명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무엇?”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중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중 2,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보유액 중 7,000억 원
- (지급규모) 1조 3천여억 원
-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
 - (지급대상) 전 경기도민 대상³⁶
 - 지급범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
 - (지급수준) 개인별 10만 원 씩 지급³⁷
 - 선불카드 충전 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사군 재난기본소득 통합신청 가능
-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형태 및 지급방식³⁸
 - (지급형태)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는 온라인, 선불카드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농협은행) 신청
 - (지급방식)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신청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

■ 제주도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³⁹
 - (지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재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⁴⁰
 - (지급규모) 총 재원은 1,100억 원,⁴¹ 1차 지급 규모는 401억 원⁴²
 - 제주도는 2차 지급까지 확정하였으며 3차 지급 추가 논의 중
-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⁴³
 - (지급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

36 도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도 지급(6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37 한국일보(2020.03.25.).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결”

38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gg.go.kr>

39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홈페이지. <https://happydream.jeju.go.kr>

40 제주신보(2020.04.08.). “제주도,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현금지원...4인 가구 50만 원”

41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위해 1,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차와 2차 각각 550억 원을 배정. 하지만 실제 1차 지급에서 401억 원의 예산이 지출됨(조선닷컴, 2020.04.15.).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9일부터 지급”

42 제민일보(2020.05.24.).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2만3000세대 수혜”

43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홈페이지. <https://happydream.jeju.go.kr>

- 12만 3,000가구⁴⁴
- (지급수준)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20만 원~50만 원)
 -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
-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형태 및 지급방식⁴⁵
 - (지급형태) 현금
 - 온라인과 오프라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 (지급방식) 세대주의 계좌로 지급
- 제주도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 예정⁴⁶

■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례 종합

-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긴급지원금의 지급규모 및 형태에서 차이 존재
 - (지급대상) 서울시·제주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vs 경기도 전체 도민
 - (지급수준) 서울시·제주도 대상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vs 경기도 1인 10만 원
 - (지급형태) 서울시 지역상품권·선불카드 vs 경기도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vs 제주도 현금

〈표 6〉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요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비교

구분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명칭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지급주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급 총 규모	5,600억 원	1조 3,000억 원	1,100억 원
지급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쏘 경기도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급수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30만 원~50만 원)	1인 10만 원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20만 원~50만 원)
지급형태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현금
지급방식	모바일 문자전송 및 현장지급	포인트 형태로 지급 (사용승인 문자수신)	계좌 지급
특이사항	선지급 후환수 (조건 미충족시)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금과 통합수령 가능(일부 제외)	2차 지급 예정 (1인 10만 원씩)

출처: 관련 자료, 문건 등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4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공무원·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제외

45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홈페이지. <https://happydream.jeju.go.kr>

46 경향신문(2020.06.16.). “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서 전 도민 지급으로 전환”

04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및 쟁점

1.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주체 및 재원⁴⁷

- 중앙정부는 코로나19로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 및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12.2조 원 확보
 - － (지급주체) 중앙정부
 - － (재원) 국채발행 및 지출구조조정⁴⁸, 지방비
 - 국채 3.4조 원, 지출구조조정 8.8조 원, 지방비 2.1조 원
 - － (지급규모) 총 14.3조 원으로 국비 12.2조 원과 지방비 2.1조 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가구 단위로 지급
 - －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상 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 2,171만 가구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가구 단위로 전 국민에게 지급
 - － (지급수준)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40만 원~100만 원)⁴⁹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지급

⁴⁷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04.30.). “제2회 추경 국회확정 보도자료”

⁴⁸ 지출구조조정(8.8조 원)은 공공부문 지출절감 등 고통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로 절감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추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04.30.)

⁴⁹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형태 및 지급방식⁵⁰

- (지급형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현금
 - 지급형태에 따라 신청기간, 사용방법 등 상이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거동이 불편한 경우 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신청’ 이용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지급⁵¹
 - 현금의 계좌로 지급⁵²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황⁵³

- 2,171만 지원 대상 중 2,160만 가구에서 신청 및 지급. 지급률 99.5%(2020.06.07. 기준)
- 지급수단별로는 현금 13.2%(286만 가구), 신용·체크카드 67.4%(1,463만 가구), 상품권 7.2%(156만 가구), 선불카드 11.8%(255만 가구)로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높음

2.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쟁점

■ 지급대상 기준 선정(선별 지원 vs 보편 지원)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초기 소득하위 70% 국민 대상으로 지원이 발표됨. 소득상위 30% 가구, 1인 가구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의 불만⁵⁴
- 가구원수별(1인·2인·3인·4인 등) 소득경계 값 불명확 및 소득과 재산범위 인정 기준 모호 등으로 대상자 산정의 어려움⁵⁵
- 최종적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대상 확대 시행

⁵⁰ 정부 24 홈페이지 코로나19 정부지원 안내.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sub03> (검색일 2020.06.17.)

⁵¹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사용. 지역사랑 상품권은 유효기간에 따름

⁵² 현금지급 대상자는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록된 계좌로 지급

⁵³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06.08.).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보도자료”

⁵⁴ 뉴스1(2020.04.03.). “내 건보료는 ‘소득급감’ 반영 안 됐는데...복잡해진 재난지원금”

⁵⁵ 서울경제(2020.03.30.). “지급대상 불분명...재난지원금 혼선”

■ 자원 마련(국비 vs 국비 + 지방비)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 부담 요구⁵⁶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역주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자원 확보의 어려움 주장⁵⁷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원분담 요구 및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재정 어려움 호소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발생⁵⁸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지급 필요 vs 지급 불필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계 소비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효과⁵⁹가 나타남에 따라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제기
 -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의 절반 이상 회복 (중소벤처기업부 발표)⁶⁰
 - 2차 추가 지급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결과 찬성 51.1%, 반대 40.3%로 찬성의견이 높지만 반대의견도 높은 수준⁶¹
 - 제주도 사례: 제주형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선별적 지급.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도민에 1인당 10만 원 지급 예정⁶²

⁵⁶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가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는 자원 마련을 위해 국비 80%와 지방비 20%(서울시는 30%)를 요구함

⁵⁷ 세계일보(2020.04.01.). "부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자원 놓고 정부와 팽팽한 기 싸움", KBS NEWS(2020.03.31.). "이재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자원분담 납득 어려워", 연합뉴스(2020.04.24.). "김경수 지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100% 지급"요청", 노컷뉴스(2020.04.16.). "서울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민 7대3 분담...유감", 영남일보(2020.04.03.). "대구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20% 분담 저지 연대 시사"

⁵⁸ 연합뉴스(2020.03.31.).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 떠넘기기...정부·지자체 이견(종합)"

⁵⁹ 국민일보(2020.06.03.). "'기본소득' 바람 잡는 여야...이재명은 '2차 지원금' 카드 꺼내"

⁶⁰ 헤럴드경제(2020.06.03.). "'재난지원금 효과'에...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절반 이상 회복"

⁶¹ 머니투데이(2020.06.04.). "국민 절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⁶² 국민일보(2020.06.21.). "선별vs보편 말 많던 제주형 2차 지원금...개별 지급 가닥"

05

긴급재난지원금 설계 방향

1.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제2차)의 지급 필요성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IMF나 OECD 모두 한국의 2020년 성장률을 -2.0% 이하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국내 기관들 대부분이 $\pm 0\%$ 대의 성장률을 전망
-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예측치인 2.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심화가 예상
- 감염병 재난의 지속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2020년 하반기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음

■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2차 대유행 등에 의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 가능성은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한 재정지출 준칙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

-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더디게 하고 현재 각국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봉쇄조치의 완화는 2차 대유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나 코로나19와 인류가 오래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재난상황에서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에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설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내지 코로나19와의 공존 시대를 대비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가계 소비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회복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점을 감안했을 때 투입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해외 유사사례의 경우 인구가 적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비교적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 －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추가 조치가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하면서도 분배 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100%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방식을 택하였는데, 중·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기존 소비에서 적지 않은 구축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소비수요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 － 따라서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또한 올해 이미 3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경제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심화로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방식은 지양될 필요

2. 잠재성장률 대비 성장률 하락폭을 연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정준칙 마련

■ 잠재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연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비율을 결정

-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선별적 지원을 위한 지급대상 선정기준 필요
- 잠재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연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하나의 준칙으로 마련. 이를 통해 선별적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 반기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추정하여 연간 2회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마련

- 이 경우에도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게 되면 자동으로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

■ (재정준칙 예시1) 잠재성장률 대비 -1% 하락/소득하위 10% 연계방안

- 만일 2020년 잠재성장률을 2.3%로 추정하였다면 2020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연간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선별적으로 결정
 -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 대비 1% 이내로 낮을 경우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10%로 선정하고, 2% 이내로 낮을 경우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20%로 선정하는 방식
 - 예를 들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5%로 예상된다면 이는 잠재성장률 추정치 2.3% 대비 4.8%가 낮은 수치이므로 전 국민의 50%를 대상으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만일 2021년 잠재성장률을 2.3%로 추정하였다면 202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연간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선별적으로 결정
 - 202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5%로 예상된다면 전 국민의 30%를 대상으로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이러한 재정준칙 하에서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 대비 -9%를 초과해서 하락할 경우, 즉 잠재성장률이 2.3%인데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6.7%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편적 지원(100%)으로 전환**

〈표 7〉 잠재성장률(2.3% 가정) 대비 -1% 하락/소득하위 10% 연계방안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잠재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예상치	2020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연간기준)	지급대상
잠재성장률 이상	2.3% 이상	없음
잠재성장률 대비 -1%이내 하락	1.3% 이상 ~ 2.3% 미만	소득하위 10%
잠재성장률 대비 -2%이내 하락	0.3% 이상 ~ 1.3% 미만	소득하위 20%
잠재성장률 대비 -3%이내 하락	-0.7% 이상 ~ 0.3% 미만	소득하위 30%
잠재성장률 대비 -4%이내 하락	-1.7% 이상 ~ -0.7% 미만	소득하위 40%
잠재성장률 대비 -5%이내 하락	-2.7% 이상 ~ -1.7% 미만	소득하위 50%
잠재성장률 대비 -6%이내 하락	-3.7% 이상 ~ -2.7% 미만	소득하위 60%
잠재성장률 대비 -7%이내 하락	-4.7% 이상 ~ -3.7% 미만	소득하위 70%
잠재성장률 대비 -8%이내 하락	-5.7% 이상 ~ -4.7% 미만	소득하위 80%
잠재성장률 대비 -9%이내 하락	-6.7% 이상 ~ -5.7% 미만	소득하위 90%
잠재성장률 대비 -9%초과 하락	-6.7% 미만	소득하위 100%

출처: 저자 작성

■ (재정준칙 예시2) 잠재성장률 대비 -0.5% 하락/소득하위 10% 연계방안

- 만일 2020년 잠재성장률을 2.3%로 추정하였다면 2020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연간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선별적으로 결정
 -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 대비 0.5% 이내로 낮을 경우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10%로 선정하고, 1% 이내로 낮을 경우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20%로 선정하는 방식
 - 예를 들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0.1%로 예상된다면 이는 잠재성장률 추정치 2.3% 대비 2.2%가 낮은 수치이므로 전 국민의 50%를 대상으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만일 2021년 잠재성장률을 2.3%로 추정하였다면 202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연간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선별적으로 결정
 - 202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로 예상된다면 전 국민의 30%를 대상으로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이러한 재정준칙 하에서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 대비 -4.5%를 초과해서 하락할 경우, 즉 잠재성장률이 2.3%인데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2%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편적 지원(100%)으로 전환**
 - 이는 잠재성장률 대비 -1% 하락/소득하위 10% 연계방안과 비교하여 동일한 경제상황에서 지급대상이 더 확대됨을 의미

〈표 8〉 잠재성장률(2.3% 가정) 대비 -0.5% 하락/소득하위 10% 연계방안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잠재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예상치	2020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연간기준)	지급대상
잠재성장률 이상	2.3% 이상	없음
잠재성장률 대비 -0.5%이내 하락	1.8% 이상 ~ 2.3% 미만	소득하위 10%
잠재성장률 대비 -1.0%이내 하락	1.3% 이상 ~ 1.8% 미만	소득하위 20%
잠재성장률 대비 -1.5%이내 하락	0.8% 이상 ~ 1.3% 미만	소득하위 30%
잠재성장률 대비 -2.0%이내 하락	0.3% 이상 ~ 0.8% 미만	소득하위 40%
잠재성장률 대비 -2.5%이내 하락	-0.2% 이상 ~ 0.3% 미만	소득하위 50%
잠재성장률 대비 -3.0%이내 하락	-0.7% 이상 ~ -0.2% 미만	소득하위 60%
잠재성장률 대비 -3.5%이내 하락	-1.2% 이상 ~ -0.7% 미만	소득하위 70%
잠재성장률 대비 -4.0%이내 하락	-1.7% 이상 ~ -1.2% 미만	소득하위 80%
잠재성장률 대비 -4.5%이내 하락	-2.2% 이상 ~ -1.7% 미만	소득하위 90%
잠재성장률 대비 -4.5%초과 하락	-2.2% 미만	소득하위 100%

출처: 저자 작성

■ 실제 재정준칙의 적용에 있어 정부의 재정상황과 경제침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성장률 대비 ○% 하락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지원방향

■ 지급규모 및 지급수준

- 지급규모는 잠재성장을 대비 성장을 하락폭과 지급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수준에 대하여 큰 논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와 동일하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만일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할 경우 지급규모는 7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결국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급형태 및 지급방식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현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가장 수가 적은 상품권의 경우도 지급대상 국민의 약 7.2%가 신청함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각 지급유형은 국민의 다양한 선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지급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지급형태를 발굴할 수도 있음
- 지급방식 역시 온·오프라인으로 카드 포인트, 현금, 상품권 등의 수단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시 소득하위 70% 국민 대상으로 지원이 발표되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의 불만과 함께 가구원수별 소득경계 값과 소득과 재산 인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등 신속한 시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혼란과 어려움이 나타남
- 향후 시행될 수 있는 제2차,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참고문헌

- IT조선(2020.06.23.).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에 백신 개발 장기화 전망”,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00991.html) (검색일: 2020.06.24.)
- KBS NEWS(2020.03.31.). “이재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분담 납득 어려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4129&ref=D>) (검색일: 2020.06.25.)
-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5.07.). “美 정부 코로나19 지원책 'CARES Act’”,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82/globalBbsDataView.do?setIdx=424&dataIdx=182597&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10001&searchNationCd=101001&searchTradeCd=1039302&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검색일: 2020.06.19.)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gg.go.kr> (검색일: 2020.06.22.)
- 경향신문(2020.03.26.).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61444001&code=940100) (검색일: 2020.06.22.)
- 경향신문(2020.04.0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이틀 만에 첫 지급…9만명 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11357011&code=940100) (검색일: 2020.06.17.)
- 경향신문(2020.06.16.). “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서 전도민 지급으로 전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61114001) (검색일: 2020.06.23.)
- 국민일보(2020.03.30.). “서울시민, 30일 접수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22753&code=61122011&cp=kd>)
(검색일: 2020.06.17.)
- 국민일보(2020.06.03.). “‘기본소득’ 바람잡는 여야…이재명은 ‘2차 지원금’ 카드 꺼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0911>) (검색일: 2020.06.18.)
- 국민일보(2020.06.21.). “‘선별’ vs ‘보편’ 말 많던 제주형 2차 지원금…개별 지급 가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14558&code=61122027&cp=nv>)
(검색일: 2020.06.21.)
-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44.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04.3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

R_000000000008&nttlid=76942) (검색일: 2020.06.17.)

- 노컷뉴스(2020.04.16.). "서울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만 7대3 분담...유감",
(<https://www.nocutnews.co.kr/news/5329133>) (검색일: 2020.06.25.)
- 뉴스1(2020.02.11.). "신종 코로나에 소상공인 97% "매출·방문객 감소, 금융 지원 필요",
(<https://www.news1.kr/articles/?3838980>) (검색일: 2020.06.23.)
- 뉴스1(2020.03.24.). "[Q&A] 이재명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무엇?",
(<https://www.news1.kr/articles/?3883756>) (검색일: 2020.06.23.)
- 뉴스1(2020.04.03.). "'내 건보료는 '소득급감' 반영 안 됐는데"...복잡해진 재난지원금",
(<https://www.news1.kr/articles/?3895664>) (검색일: 2020.06.23.)
- 뉴스워커(2020.06.22.).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국민 긴장감 고조'...피해 최소화 위한 방법은?",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30>) (검색일: 2020.06.23.)
- 뉴스타치(2020.03.23.). "S&P '코로나19 확산 한국 경제성장 마이너스 성장' 전망",
(<http://www.newstouch.site/news/articleView.html?idxno=5331>) (검색일: 2020.06.25.)
- 뉴스핌(2020.06.22.). "팬데믹에 탈세계화 '속도' 곳곳에 무역 장벽",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22000006>) (검색일: 2020.06.23.)
- 매일경제(2020.05.2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마감...164만 가구 지원 예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19476>) (검색일: 2020.06.18.)
- 매일경제(2020.06.10.). "IMF 이어 OECD도..."한국, 최악의 경우 -2.5% 성장",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596412/>) (검색일: 2020.06.21.)
- 머니투데이(2020.05.12.). "일본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인데 관공서 마비된 사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21115195014>) (검색일: 2020.06.18.)
- 머니투데이(2020.06.04.). "국민 절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408507697869&outlink=1&ref=%3A%2F%2F>) (검색일: 2020.06.18.)
- 머니투데이(2020.06.28.). "예정처 "향후 5년간 한국 잠재성장률 2.3%에 그칠 듯",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811077640703>) (검색일: 2020.06.29.)
- 서울경제(2020.03.30.). "지급대상 불분명...재난지원금 혼선",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EGFZTMJ>) (검색일: 2020.06.18.)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주요Q&A.
<https://wis.seoul.go.kr/faq-pop.htm#line2> (검색일: 2020.06.19.)
- 서울신문(2020.06.22.). "산업연구원 "비대면 제외한 전산업 수요부진...과감한 투자유인책 필요"",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82%B0%EC%97%85%EC%97%B>

0%EA%B5%AC%EC%9B%90-%E2%80%9C%EB%B9%84%EB%8C%80%EB%A9%B4-%EC%A0%9C%EC%99%B8%ED%95%9C%EC%A0%84%EC%82%B0%EC%97%85-%EC%88%98%EC%9A%94%EB%B6%80%EC%A7%84%E2%80%A6%EA%B3%BC%EA%B0%90%ED%95%9C%ED%88%AC%EC%9E%90%EC%9C%A0%EC%9D%B8%EC%B1%85-%ED%95%84%EC%9A%94%E2%80%9D/ar-BB15OJnm) (검색일: 2020.06.25.)

- 세계일보(2020.04.01.). "부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놓고 정부와 팽팽한 기싸움",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01523224?OutUrl=daum>) (검색일: 2020.06.25.)
- 세계일보(2020.06.22.). "‘코로나 쇼크’에 6월 중순까지 수출 -7.5%… 4개월 연속 감소 전망",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22512258?OutUrl=naver>) (검색일: 2020.06.23.)
- 아시아경제(2020.06.24.).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 심리 회복세 “어디서 어떻게 쓸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2409271871246>) (검색일: 2020.06.24.)
- 아시아경제(2020.06.29.). "韓銀 "코로나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817171405634>) (검색일: 2020.06.29.)
- 연합뉴스(2020.03.31.).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 떠넘기기...정부·지자체 이견(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1146151051?input=1179m>) (검색일: 2020.06.25.)
- 연합뉴스(2020.04.24.). "김경수 지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100% 지급"요청",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43900052?input=1179m>) (검색일: 2020.06.25.)
- 연합뉴스(2020.05.26.).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동나...2천328억 원 추가 수혈",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120400004>) (검색일: 2020.06.23.)
- 연합뉴스(2020.06.18.). "당국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모두 대비...폭발적 확산 가능성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099700530?input=1195m>) (검색일: 2020.06.24.)
- 영남일보(2020.04.03.). "대구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20% 분담 저지 연대 시사",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402010000368>) (검색일: 2020.06.25.)
- 오마이뉴스(2020.04.02.). "코로나19 '즉시지원금' 680만원, 3일 만에 현금 수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864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검색일: 2020.06.24.)
- 육도삼략365(2020.05.06.). "미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돈퍼붓기...2분기 3조달러 국채 발행", (<http://www.thecommoditie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2>) (검색일: 2020.06.19.)
- 이데일리(2020.03.28.). "[서울러안내서]신청부터 수령까지, 재난긴급생활비 ‘꿀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8566625707912&mediaCodeNo=257>)

(검색일: 2020.06.23.)

- 인사이드(2020.06.02.). “국민의 74%가 문 대통령에게 ‘2차 지원금’ 달라고 요구했다”,
(<https://www.insight.co.kr/news/286800>) (검색일: 2020.06.24.)
- 정부 24 홈페이지 코로나19 정부지원 안내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sub03> (검색일: 2020.06.17.)
- 제민일보(2020.05.24.).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2만3000세대 수혜”,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179>) (검색일: 2020.06.23.)
- 제주신보(2020.04.08.). “제주도,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현금지원...4인 가구 50만 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243>) (검색일: 2020.06.04.)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홈페이지. <https://happydream.jeju.go.kr> (검색일: 2020.06.24.)
- 조선닷컴(2020.04.15.).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9일부터 지급”,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5/2020041500625.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20.06.23.)
- 조선비즈(2020.06.24.). “IMF, 올해 韓 성장률 전망치 -1.2→ -2.1%로 하향...“상당한 하방위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4062.html) (검색일: 2020.06.25.)
- 조선비즈(2020.06.24.). “코로나 충격 연말까지 가면 기업 유동성 54조 원 부족”,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1640.html) (검색일: 2020.06.25.)
-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2020.04.13.). “코로나-19 대응 2020년 싱가포르 정부 2차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1/view.do?seq=13407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검색일: 2020.06.19.)
- 파이낸셜뉴스(2020.06.24.). “세계경제 회복은 2022년에나 가능”,
(<https://www.fnnews.com/news/202006241434221861>) (검색일: 2020.06.25.)
- 한겨레(2020.04.21.). “뒤통 방역 일본의 신속한 현금 지원 배경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41431.html>) (검색일: 2020.06.24.)
- 한국경제(2020.06.07.).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 ‘미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0796661>) (검색일: 2020.06.25.)
- 한국무역신문(2020.04.23.). “코로나19에 각국 재정지출 급증...생계·고용 지원 나서”,

(<http://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no=63944>)
(검색일: 2020.06.19.)

- 한국은행(2020). “워싱턴주재원 현지정보, IMF Chief Economist Gopinath 모두 발언, 대봉쇄 :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23/view.do?nttlId=10057671&menuNo=200082>) (검색일: 2020.06.24)
- 한국일보(2020.03.25.).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251430342123>) (검색일: 2020.06.23.)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06.08.).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등 신청 지급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77733) (검색일: 2020.06.17.)
- 헤럴드경제(2020.06.03.). “‘재난지원금 효과’에…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절반 이상 회복”,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603000158>) (검색일: 2020.06.18.)
- 헤럴드경제(2020.06.22.). “청년층 ‘코로나19’ 최대 충격, 환란보다 더 큰 고통…피해 장기화 우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22000063>) (검색일: 2020.06.23.)
- Kim, Sam & Yoshiaki Nohara. (2020.05.21.). “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 Bloomberg economics.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2020.03.27.)
-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0), IMF
- <https://myna.go.jp> (일본 재난지원금 공식 사이트) (검색일: 2020.06.24.)
- https://myna.go.jp/SCK0101_01_001/SCK0101_01_001_InitDiscsys.form (일본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검색일: 2020.06.24.)
-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 (미국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검색일: 2020.06.17.)
- https://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20/budget-measures/care-and-support-package (싱가포르 Care and Support - Cash 공식사이트) (2020.06.17.)
- <https://www.ibb.de/de/wirtschaftsfoerderung/themen/coronahilfen/coronahilfen.html>
(독일 베를린시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검색일: 2020.06.17.)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이슈페이퍼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보고서를 '[저작권법] 제24조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사용하실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